



올림픽공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김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서울농협(본부장 이대업)과 함께 19일 올림픽공원에서 '올림픽공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장터는 19~20일, 26~27일 2회에 걸쳐 개최한다. /뉴시스

농식품부, 농약 피해구제 쉬워진다

2023년 농약관리법 개정안 시행

2년 뒤부터 농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농약 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부처에 설치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약 피해 관련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돼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약 피해를 본 경우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작업 시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 흩날림(비산) 우려가 큰 드



2023년부터 농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농약을 치고 있는 농부들.

론 등을 이용한 농약 살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약 유통과 관리 기관은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해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에 장기복 임용

친환경 총괄에 첫 민간 전문가 선정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이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임용됐다. 친환경전환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민간 전문가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와 인사혁신처는 국장급 경력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장 선임연구위원을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에 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장 정책관은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가치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등 경제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현과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 및 친환경소비 확산 정책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된 장 정책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 국장급 역량평가, 고



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됐다.

장 정책관은 26여년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근무해 온만큼 환경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탄소 중립, 환경산업의 육성 및 통합환경관리 제도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다.

또, 환경기술 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환경산업 육성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 있어 녹색전환정책관의 직위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받았다.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통해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비전을 환경경제, 환경연구정책과 연계하고 녹색혁신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노후 위험시설 교체 영세사업장에 고용부 '최대 10억' 저리 융자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실시
예산 3228억... 1.5% 고정금리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노후 위험설비 교체를 원하는 영세 사업장은 최대 10억원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 공정을 개선할 경우 연

1.5% 고정 금리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의 장기 저리로, 사업장 1곳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32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었다. 올해 5월 말까지 2300여개 사업장이 신청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단이 2017~2019년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간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지원 전보다 평균 31.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1544-3088)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설비 교체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쉽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올 수도권 수소충전소 10기 추가 구축

환경부, 추가예산 150억 확보
민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올해 안으로 수도권 인근 지역에 10기의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구축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오곡동과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인천 오류동 및 송도동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10기 구축을 위한 민간 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수소충전소 자체 부지를 발굴하고,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 150억원을 확보했다. 지

난 11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민간보조사업을 공고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연내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심사에 선정했다.

그 결과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기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한 E1과 SK가스 부지 4기가 포함됐다. 또,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 서울 근접 2기 등 서울시청으로부터 약 25km 이내 인접 지역 총 8기 후보지가 선정됐다.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과대규모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될 인천 지역(오류동 및 송도동)에 지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10기 후보지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

정한 뒤 인허가부터 설비·장비 확보 및 구축 공정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월14일부터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시행하고,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선정되지 않은 사업 중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이 다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180기 이상 구축해 수소차 보급의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선정된 사업이 연내 추가 구축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수소 충전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공정위, 육군복원단 입찰담합 3곳에 과징금 3.7억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원단 구매 입찰에서 3개 업체가 담합했다 털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제재를 받은 아즈텍더블유비이, 킨텍스, 조양모방 3개사에 과징금 총 3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아즈텍더블유비이 1억5000만원, 킨텍스 1억2800만원, 조양모방 9300만원이다.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방사청이 2018년 6월21일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나누고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시세가 오르자, 저가 경쟁으로 입찰 수익성이 나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입찰에 다른 참가자가 없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찰에서 동정부 원단은 아즈텍더블유비이, 하정복 원단은 킨텍스, 하근무복 상의 원단은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각사의 입찰 담당 임직원들은 입찰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원단 구매 입찰에서 3개 업체가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군복을 입고 인사하는 학사사관후보생들.

마감 전날인 2018년 6월28일 회합했다. 이 자리에서 사전에 정한 품목을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찰가격을 정했다.

그해 6월28~29일 이들 간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아즈텍더블유비이와 킨텍스는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받았는데 당시 총 계약금액은 약 46억5000만원에 달한다.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하고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써냈다. 하지만, 사업자 능력 평가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2순위인 킨텍스가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사청이 발주한 육군복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